

교수의 현실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

박 흥 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교수 정치참여의 행태

필자가 이 글에서 반대하는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란 현실 정치에 정당원이나 관료 등으로 참여하거나, 선거 때 특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돋는 협의의 정치 참여를 말한다. 즉, 대학 교수가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기 위하여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광의의 정치 참여까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지식인인 대학 교수의 올바른 사명이라고 생각하므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대학 교수

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서구 특히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 대학 교수가 협의의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전통은 특히 서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 곳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는커녕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도 일반적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사실은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반면 광의의 정치 참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대학과 정계 그리고 재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협의의 정치 참여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이른바 명예와

권력과 부는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없다는 가치관에 따라 교수는 권력이나 재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광의의 정치 참여도 서구에 비해서는 보다 소극적이다.

이러한 서구와 일본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지식인으로서의 대학 교수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적인 구별이지만 서구에서는 ‘사상가 내지 지도자로서의 지식인이 교수’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이 아직도 지배적이거나, 일본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인이 교수’라는 기능적인 개념이 서구보다는 강한 탓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하면, 서구의 기독교적 정신구조의 전통에서는 대학 교수라는 지식인의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일본에서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대학 교수가 하나의 기능적인 전문 직업으로 형성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교수상이 뿐리내리지 못한 탓이라고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선비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식인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구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나, 그것이 서구적 의미의 지식인상과 과연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대부분의 대학 교수는 일본의 대학 교수들처럼 전문적 기능인으로 살고 있으나 그것 역시 일본식의 엄격한 가치 분배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그래서 난세가 아닌 한, 왕이 부르면 언제나 응한다고 하는 기회주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통적 선비관과, 후진국형 권력 중심화 내지 집중화 현상, 그리고 천민 자

본주의식 기회주의적 출세관이 맞아 떨어져 독특한 적극적 현실 참여관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연과 학맥으로 인해 떼거리로 몰려 다니는 현상까지 있다.

물론 이는 필자가 아는 많은 교수들(이들은 법학이나 사회과학 계열의 교수가 중심이나, 다른 분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의 담론을 통하여 평소에 느낀 바를 생각해 본 것에 불과하고, 명백한 역사적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개각이나 국회 의원 선거 때에 ‘입각하지 않느냐’, 또는 ‘출마하지 않느냐’는 농담을 즐겨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그렇게 기대하고 자신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차관으로 입각하고, 선거 때 학연이 있는 교수들끼리 몰려 다니는 경향이 한국만큼 뚜렷이 나타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의 보기 어렵고 서구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 입신하여 상당 기간 활동한 후에 출마 또는 입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직에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그 직책이 종료되면 서구와 같이 정당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교수로 복귀한다.

이러한 현상을 정당 정치의 짧은 탓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이라고 할 것인가의 평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정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학 교수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치 참여 교수가 과연 제대로 정치를 했는가? 예컨대, 우리나라를 가장 근본적으로 망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교수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에 편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도대체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수’라는 것으로부터 여타의 정치인들과 다른 그 무엇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진보성이라도 돋보인다(보기 나름이지만). 그러나 교수 출신이 과연 진보적이었는가? 도리어 더욱 보수적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교수라는 신분 자체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탓은 아닌가?

지식, 지식인과 참여의 본질 문제

여기서 지식과 지식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본래의 지식인이라니 지식 그 자체를 그리고 지식 전체를 지적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 종합적인 사상가를 의미했다. 그러나 지식이 전문화되고 단편화되면서 사상가로서의 지식인상은 사라졌다.

이는 국가와 산업 및 대중의 기능과 역할이 기술적, 정보적으로 분화되면서 지식인의 종체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사회적 수요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상아탑으로 상징되는 은둔적인 아카데미즘을 비롯하여 지식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지식을 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혐오하고

경멸하며 거부하는 대중사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현대에 와서 ‘지식의 종체적 이해자’가 아닌 ‘전문가’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인이 등장했다. 그는 지식을 기술적, 기능적으로 조작하고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뷔로크라트,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트 등으로 불리는 첨단의 전문가이다. 곧, 본래 지식인을 뜻하는 종체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새로운 지식인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전문가는 수도 없이 많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지식인 규모가 확대된다는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 있다. 곧, 사상가로서의 지식인은 지식을 회의의 대상으로 삼으나, 전문가 지식인은 어떤 회의도 없이 기존의 현상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나 기업 또는 대중이 흥미를 느끼는 것만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약간의 전문적인 처방전을 내린다. 그 것도 아주 달콤한 설탕약으로 말이다. 바로 그러한 지식인들에 의해 IMF 사태가 초래된 것이 아닐까?

지식인이 국가나 기업의 권력적 작동에 의해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한다면 IMF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는 초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 지식인은 사물의 내면을 째뚫어보려는 노력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사물이 외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만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것이 한국 현대 지식인의 전형이 아닐까?

이러한 상업적 지식인을 고전적 지식인상

의 입장에서 ‘지식인의 배반’이라고 부른 사람은 줄리앙 방다였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을 나몰라라한 지식인들을 ‘추상적 정의와 민주적 합리주의’의 수호라는 지식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국가의식과 계급의식, 그리고 물질주의에 탐닉한 배반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지식인들에 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 지식인의 전문적 지식은 본래 전체적 지식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문 지식의 효용에만 의존할 경우 전문가 지식인은 ‘전문가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문제는 그러한 전문가 바보가 사회적으로 활약하여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고 있는 IMF의 본질이 아닐까? 전문적 지식인으로서 최고급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듯하나,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는 단순히 교수의 개인적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곧 현실의 고도 산업사회에서 대학은 당연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와 밀착된 장소는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나 관청이기 때문이다. 그 곳이 전문적 지식인의 중요한 활동무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이나 관청은 대개 대학보다 우수한 정보의 창고를 보유하며, 그것을 조작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인재나 조직도 훨씬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은 학문적 지식인 중 상이 군인이나 패잔병의 수용소 같기도 하다. 곧 대학은 조작 가능하고 응용 가능한 지식만을 취급하나, 실제로는 조작 능력이나 응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학 교수는 전문적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

하며 응용하는 것을 일찍 그만두고, 대학행정이나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 등에 투신하는 병리적인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다양성과 가변성으로 가득 차 언뜻 보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욱 더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전체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존하는 기본적 보수 이데올로기는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은 표현의 수단과 정도일 뿐이고 그 의미나 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부동적이다. 여기서 전문적 지식인은 정보 소비의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한번 유명해진 전문적 지식인은 순식간에 잊혀진다. 그가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지성적 비판에 충실하자

최근 ‘사기꾼 교수들’을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킨 혼택수는 『인물과 사상』 제7호의 “인문학의 위기와 사기꾼 교수론”에서 정·관계에 진출하여 입신양명을 꿈꾸는 권력지향적 폴리페서(polifessor)를 ‘학문에는 진정한 뜻이 없고 정치적 권력 행사에 재미를 느끼는 교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내 정치에 분주한 ‘리틀 폴리페서’와 현실 정치에 분주한 ‘빅 폴리페서’로 구분한다.

그는 빅 폴리페서의 예로 김영삼 정권 때 세계화 담론을 들먹거리며 책과 보고서를 양산해서 재미를 본 학자들을 들면서, 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인으로서의 사회 비판 의식 결여라고 하였다. 즉, 지식인이 권

력정치의 중심부에 들어서게 되면 일단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거나 구조적으로 이미 비판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그들이 정치 참여 이전에는 과연 지성인으로서 비판적이었는가 하는 점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회 비판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평소 교수들의 행태로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대학 교수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의 총장 직선제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선거 과정은 인맥과 학맥에 얹혀 참으로 추악하기 그지없다. 선거의 논공행상으로 보직을 나누는 작태가 선거 뒤에도 이어지고, 교수들이 더욱 분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 또는 임명제라고 하는 구태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폴리페서는 한통속이다. 대체로 리틀 폴리페서로 출세한 이가 빅 폴리페서로 발전(?) 한다. 교수 중에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고, 총장 출신이면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현택수는 교수에게 사회 비판 의식이 부재하는 근본 이유를 학자로서의 전문성 결

여로 보고 있는 듯하나, 이는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 도리어 나는 과도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교수들의 비판의식이 결여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전문성이 결여된 교수를 아마페서(amafessor)로 불렀는데 이는 시류에 따라 아마추어 수준의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도 프로인 척하는 사기꾼 교수들을 말한다고 한다. 이들의 강의나 논문은 당연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도매금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보다 지식 전체를 총체적 회의의 대상으로 삼는 진정한 비판적 태도의 종합적 지성상이, 그리고 '전문가 바보'라는 무비판적 상업 지식인이 아닌 참된 사회 비판의식을 갖는 지식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 교수는 그런 총체적 자식에 대한 회의자로서 거듭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인맥이나 학맥에 얹혀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인기만을 의식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방황하는 모습은 대학을 망치고 학문을 망치며 정치까지도 망친다. ■

박홍규/영남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시립대 대학원 박사과정과 영국 노팅햄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영남대 법학과 교수로 있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과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 객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노동법』, 『사법의 민주화』, 『한국과 ILO』 등이 있다.